

통계위원회

10월 12~15일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04년 OECD-UNECE 합동 국민계정 전문가 회의에서는 OECD내 국민계정 관련 공식기구인 국민계정 작업반(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WPNA)의 설치, 물량지표에 의한 비시장 산출액의 측정, 생산성 분석 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통계 개선 등 국민계정 관련 주요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주요 의결안건

우선 1980년부터 계속되어온 국민계정 전문가회의를 OECD 통계위원회 산하의 공식 작업반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 선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비시장(non-market) 산출액의 측정 관련 영국 Atkinson 검토패널의 보고서에 관한 심층토의가 있었다. 현재 정부부문의 산출액은 투입비용으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동 부문에서는 생산과 투입의 비율로 측정되는 생산성의 변화를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Atkinson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시장부문에 대한 생산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보건 서비스 등 분야를 중심으로 물량지표 등을 이용하여 산출액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

시하였다. 예컨대 교육부문의 경우 물량지표로는 등록학생 수 또는 학업성취도, 보건서비스부문의 경우는 보건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수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에서 서비스의 품질조정 및 집합성(collectiveness) 등 측정(measurement)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장기과제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물량지표 활용이 가장 크게 기대되는 교육분야 산출액 측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여러 측정방법 적용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원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험측정 실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생산성 분석을 위한 취업자수, 연간 평균노동시간 등의 자료를 국민계정 개념(예를 들어 경제구역내 외국인 취업자의 포함)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고 특히 일부 국가에서 '직업(job)' 기준으로 OECD에 통보하는 취업자수 통계를 '사람(person)'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권장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갖는 경우 직업기준으로는 취업자수가 복수가 되지만 사람기준으로는 주된 직업 하나만 산정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사람' 기준으로 작성, 보고 중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주요 논의안건

가. 연금 지급의무의 부채 처리

현행 1993 SNA에서는 무기금 고용주연금(unfunded employer pension schemes) 지급의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 SNA에서는 연금의 지급의무를 부채로 계상하자는 제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공무원연금 등이 주요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금지급의무가 부채로 처리되면 공공부문의 부채 및 적자 등 주요 지표가 크게 변경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현 계정이 경제주체들이 인식하는 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가계부문의 저축률 왜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동 제안을 지지하였다. 반면 벨기에, 프랑스, OECD 사무국 등은 특정 국가에서의 개혁 프로그램 추진시 부채 자체가 변경될 수 있고 주요 지표가 단순한 계정처리 변경에 의해 심하게 변동됨에 따라 주요 지표의 불안정성이 심화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나. 무수익자산 관련 IMF의 전자토론그룹(EDG) 보고

93SNA에서는 무수익자산을 그대로 명목장부가치로 기록함에 따라 현재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무수익자산에 대

해 시가평가액을 반영하도록 SNA 개정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네 가지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현 SNA의 명목가치 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네덜란드), 현 체제하에서 주식항목으로 시장가치 기업을 의무화하는 방안(미국, 스페인, ECB, 프랑스, 한국 등), 채권자계정은 시장가치, 채무자계정은 명목가치로 하는 방안(OECD), 시장가치로 편제, 주식항목으로 명목가치 기업을 의무화하는 방안(캐나다, 일본, 덴마크, 호주 등) 등 의견이 갈렸으나 현재 제2안에 대한 지지가 우세한 상황이며 2004년 12월 AEG(Advisory Expert Meeting)에서 의결사항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 시장가치개념 반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가치평가에 대한 실무적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그 한 방안으로 ‘명목가치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안되었다.

다. 국민계정에서의 대손충당금 처리

국민계정에 대손충당금을 반영하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미국, 호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라. 공공부문 계정과 민간부문 계정과의 조화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자벤처 또는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s: SPV) 등의 경우 거래기록을 비율배분하는 방안, 조

세감면의 기록시점은 발생주의를 유지하고 조세부과액을 초과하는 조세감면(payable tax credits)은 정부지출로 처리하자는 제안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한편 정부와 민간의 구분 기준으로서 ‘통제(control)’ 기준 외에 정부에 대해 수혜(benefit)기준 등을 추가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의 경우 통제 기준만으로는 정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수혜기준을 추가하면 공무원연금의 수혜는 정부가 아니라 공무원이므로 정부부문에서 제외되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이미 민간(금융)부문으로 포함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변화는 없고 다만 SNA 매뉴얼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분에 의한 수익의 발생주의 처리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정부가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채투자수익으로 의제하여 정부의 수입(즉 소득)이 있는 것으로 처리토록 의제 추진할 것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캐나다 등 일부 대표가 의제 처리 등에 따른 경제적 의미의 불명확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의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바. 소유권 이전비용

비금융자산의 소유권 이전비용은 고정자

본 형성으로 계속 처리하고 자산취득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비용을 자산의 전체 기간에 걸쳐 상각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상각처리할 것을 권고하는 제안이 토의되었다. 동 제안은 소유권 이전비용 중 철거비용을 추정하여 보유기간 중 상각하자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동 발전소의 철거비용을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간 중에 상각하자는 것이다. 영국, 미국, 호주는 동 안을 지지하였으나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철거비용 추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현재와 같이 철거시점에서 상각하는 방식을 유지하자고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 방안은 이전비용, 철거비용 등을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함으로써 순자본스톡 수준을 과대평가(overstate)하는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2004년 12월 AEG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토의하기로 하였다.

사. 국민계정에서의 DATA BASE 측정

1993 SNA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만을 고정자본 형성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모호하므로 1년 이상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고정자본 형성으로 처리토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 자본서비스의 생산계정 도입

자본서비스는 고정자본소모 외에 고정자산 수익 등 추가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

산계정에 고정자산, 재고, 토지 및 자연자산으로부터의 자본서비스의 가치를 하위항목으로 나타내주도록 권장하는 방안이 토의되었다. 시장산출물의 경우 산출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으로 포착되므로 자본서비스의 가치가 생산계정에 반영되더라도 산출액이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시장산출물의 경우 GDP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즉 비시장산출물의 경우 생산비용(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조세로 구성)을 산출액으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 중 자본재 관련 비용에 고정자본소모에 비해 포괄범위가 넓은 고정자산 수익을 포함하게 되면 생산비용이 더 크게 계상되고 결과적으로 산출액이 증대된다. 호주, 캐나다 등은 영업잉여 기여분에 대한 분석능력 향상을 이유로 동 안을 지지하였으나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등은 자산수익률 산정의 어려움, 비생산자산으로부터의 자본서비스 추정액의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부 등 비시장 자산의 자본서비스 산입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지지한 반면 독일 등 유로지역 국가들은 반대의를 표명하여 2004년 12월 AEG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자. 토지개량의 처리

토지개량은 현 SNA에서는 고정자본 형식으로 계상되지만 대차대조표에서는 비생산자

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비생산자산에 대하여 고정자본소모를 계상하는 일관성 없는 계정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별 가능한 토지개량은 생산자산으로, 식별 불가능한 경우는 토지와 토지개량 중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의 크기에 따라 비생산자산 또는 생산자산(토지가 비중이 큰 경우는 비생산자산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생산자산으로 처리)으로 처리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대부분의 국가가 동 제안을 지지하였는데 다만 몇 가지 관련된 의문점(토지 관련 이전비용 상각처리방식, GDP 총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2004년 12월 AEG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차. 광물 탐사와 매장액의 처리

시험시추비용 및 항공촬영비, 수송비용 등 시험시추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는 광물탐사비용을 고정자본 형성으로 처리하고 광물 매장액을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ation) 등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카. 기타 정보사항

최근 증대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과 서비스산업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를 세분화하는 표준산업분류 개정작업(제4개정판)이 2007년 초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상위 대분류는 6부문에서 9부

문으로, 대분류는 17부문에서 21부문으로, 중분류는 60부문에서 87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통계청은 중분류를 65부문으로 제안 중에 있다.

한편 OECD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계정 자료 국제교환시스템(National Accounts World Wide Exchange: NAWWE)을 2005년 말 구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미 호주, 캐나다, 프랑스를 대상으로 시험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국 및 국제기구들은 시스템 자체에 의한 자료검증 및 완전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시사점

동 회의에서는 OECD 회원국 대표, IMF, Eurostat, UNSD, UNECE의 국민계정 전문가,

ECB, BIS 등 국제기구 관계자, 러시아, 보스니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의 옵서버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하여 SNA93 개정을 위한 향후 주요 세부 추진과제 등에 대한 기술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국민계정 관련 국제전문기구의 업무 추진방향 파악 및 각국의 best practice를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인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토의사항의 경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GDP 추계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려면 동 회의에서 주도하는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기초통계 개발 등 국민계정 통계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양우 주OECD대표부 주재관

ywkim02@mofat.go.kr】